

전라북도, R&D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우수인력 영입 · 인구유입 효과 톡톡

2010년부터 9년새 연구원 255명 영입 가족 포함 728명

전북도가 타 시도 우수 연구원의 도내 영입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R&D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이하 '주거비 지원 사업')'이 우수 연구원 영입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까지 내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주거비 지원사업의 우수 연구원 영입 및 인구유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총 255명의 우수

연구원을 영입, 이들 연구원이 동반이주해온 가족까지 포함하면 무려 72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거비 지원 사업은 그동안 총 33억원의 도비가 투입,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비 지원을 통해 신규 R&D인력은 물론 동반가족까지 유입하는 등 직접적인 인구증가와 미래인재 유입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거비 지원 사업은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대출액의 이자 또는 월세의 일부 보전을 통해 타 지역의 우수 연구원이 주거문제 등의 이유로 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잠재적인 도내유입 R&D연구기관 연구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로 이전하는 연구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전세와 매입·신축 자금을 한해서는 1억 5천만원 이내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연간 600만원 이내)하고, 월세자금에 본인 부담액의 80%(연간 400만원 이내)를 지원해 준다.

선정된 연구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간이며, 가족을 1인 이상 동반하여 이주한 연구원에 한해 연장신청 시 1년간 추가 지원한다.

다만, 반드시 전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전병순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주거비 지원 사업은 수준 높은 R&D 연구원 영입을 위해 도내 R&D인력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전라북도가 국내 R&D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기존 1500원서 3000원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내달부터 인상

오는 7월부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 수수료가 인상된다.

전주시보건소는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발급 수수료가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998년 이후 20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공포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44호)에 따른 것이다.

또한,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진기준일도 기존 '판정일로부터 1년'에서 '검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사 항목은 결핵, 장티푸스 등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모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를 받은 후 휴일을 제외하고 5일 뒤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만세” 25일 전주 오페리스퀘어를에서 열린 6.25전쟁 제68주년 기념행사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 포상금 지급

전북선관위, 980만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3명에게 총 9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전북도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C씨에게 400만원을, D씨가 선거구민 등에게 00시장선거 후보자 E씨와 00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F

씨 및 G씨를 지지·소개하고 21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H씨에게 300만원을, 00시장선거 후보자 I씨의 자원봉사자 J씨가 후보자 I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고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기자인 K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L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역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시장님, 이것만은 꼬~옥”

‘민선7기 전주시에 바란다’ 이벤트 진행 시, 일자리·청년·문화 등 7가제 주제로

전주시가 민선7기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시 공식 블로그(blog.jeonju.go.kr)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오는 7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제안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 공식 블로그에 접속해 ‘민선7기 전주시에 바란다’ 댓글로 제안 사항을 작성하면 되며, 제안 주제는 일자리, 청년, 문화, 도시, 복지, 환경, 관광 등 총 7가지 중 선택하면 된다.

이벤트 추첨을 통해 100명의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며 이벤트 게시물을 본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

김선경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꿈꾸는 민선7기 전주시에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들어보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제안에 주신 의견들은 향후 전주시를 더 좋은 도시로 성장시키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 당첨자는 다음달 4일 시 공식 블로그(blog.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靑 “JP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여러조건 다 고려해 무궁화장 추서 결정”

청와대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문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추서 문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가 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서를 하러 가는 김부겸 장관에게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서 애도를 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문 대통령의 조문은 이것으로 같음한다”고 설명했다.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모란장(2등급)▲동백장(3등급)▲목련장(4등급)▲석류장(5등급) 총 5개로 나뉜다.

전직 국무총리 중에는 이영덕·박태



준·남덕우·강영훈 전 총리에게 생전 내지는 사후에 각각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박태준 전 총리와 강영훈 전 총리는 생전에 추서됐고, 이영덕·남덕우 총리는 사후에 추서됐다.

이외에도 지난 3월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 바 있다.

하지만 정직원 안팎에서는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에 가담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무궁화장 추서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양기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조문을 가진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외에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다른 인사의 조문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